



즉시 배포용: 2020년 12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레스토랑 업계를 지원하고 고령자를 돕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부동산세 혜택을 위한 안전한 갱신 및 등록

레스토랑 소득세 신고 기한 2021년 3월까지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인 취약계층 주택 소유자와 레스토랑 업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 202.83호](#)에 따라 지방 정부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 뉴욕 주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대면 갱신 신청 의무를 중단하여 2021년 자산을 소유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고령자가 부동산세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구역에 위치하여 실내 식사가 중단된 레스토랑의 소득세 신고 기한은 3월까지 연장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집단적 힘을 시험에 들게 했으며 너무 많은 뉴욕 주민이 재정적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 일부인 65세 이상의 뉴욕 주민과 레스토랑 산업을 대상으로 많은 세금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발견한 가운데, 우리는 가능한 한 뉴욕 주민을 계속 지원하고 연방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구호를 제공하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및 장애인 수천 명이 매년 재산세 공제 혜택에 의존하여 주거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제 혜택을 신청하거나 갱신 자격이 있는 뉴욕의 고령자 및 장애인은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주 전역에 위치한 타운홀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서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전염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신청 방식 변경으로 인해 심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인원이 줄어들어 코로나의 확산을 제한하면서도 필수적인 감세 절차의 시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방 정부는 2020년에 세금 혜택을 받은 모든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거주지 주소를 변경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다른 소유주가 추가되었거나 부동산이 다른 소유주에게 양도되었거나 해당 부동산을

떠난 경우가 아니라면 2021년에도 세금 혜택 수령 자격을 자동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혜택 제공 외에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를 포함한 오렌지 구역의 레스토랑의 주정부 소득세 신고 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피해 지역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일시적으로 실내 식사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매출에 대한 소득세 신고 기한이 12월 21일에서 2021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코로나19 기준 달성으로 추가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역사회에 위치한 레스토랑 및 바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뉴욕이 연방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재정 구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합니다. 피해를 받은 레스토랑이 이러한 구제 조치를 신청 하려면 [세무부\(Tax Department\)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